

# Special Issue Brief

February 2021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국제대학원

1. 들어가는 말
2. 브렉시트에 따른 EU-영국 통상관계
3. 영국의 대외통상정책 전망
4. EU의 통상정책 전망
5. 한국의 대응
6. 나가는 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 1. 들어가는 말

2020년 12월 31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아마도 당일 23시(GMT 기준)를 기하여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었다는 뉴스였을 것이다. 2020년 2월 1일 EU 회원국 지위를 포기한 영국이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으로 설정되었던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협상을 통해 EU-영국 사이의 '새로운 무역 및 협력협정'에 합의하고 2021년을 기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EU가 지난 47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진짜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향 각지 언론보도가 넘쳐났다.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영국과의 협상의 최종단계를 관리해 온 독일 출신의 폰데어라이언(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은 영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2020년 12월 24일 "우리는 이제 영국과 공정하고 균형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EU의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EU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요구했던 예측가능성도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브렉시트가 공식화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었다.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52%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후 영국의 공식적인 EU 탈퇴가 완성되기 까지 4년반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2018년 11월 채택되었던 '탈퇴협정'과 그 부속문서인 '정치선언'은 약 1년간의 후속협상을 거친 후 2019년 10월에 와서야 비로소 그 수정안이 타결되어 '질서있는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년 2월 1일 EU 회원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영국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EU와의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양자 간의 새로운 통상협력관계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 2. 브렉시트에 따른 EU-영국 통상관계

브렉시트가 완성된 이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는 기본적으로 EU-UK 무역 및 협력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이 EU의 회원국으로서 향유해 왔던 공동시장의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력과 자본 등 소위 생산요소라고 불리우는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자유무역을 행해지더라도 양자가 개별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국내산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신문에서 보도되었듯이 2021년 1월 중순 영국에서 EU 회원국인 네덜란드로 여행을 위해 입국하던 영국의 가족이 식사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햄버거를 압수당한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로서, 브렉시트 이후 달라진 양자 간의 통상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겠다.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보였던 영국에 속하는 북아일랜드 지역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문제는 자유로운 통관을 허용하는 선에서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sup>1)</sup> 을 통해 비교적



박성훈 교수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고려대 KU-KIE-SBS  
EU센터 소장  
- Jean Monnet  
Chair 교수  
E. [shpark@korea.ac.kr](mailto:shpark@korea.ac.kr)

무리없이 타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와 영국은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의 다른 지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통관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프리패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양한 EU의 규정들이 예전과 같이 적용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불만이 싹틀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아일랜드 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EU 회원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을 위한 각종 문서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시장의 지위를 잃게 된 영국의 국민들은 EU로의 여행이나 이주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쉥겐(Schengen) 회원국으로 여행에 나설 경우 180일 범위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영국에서 취득한 각종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한 자동적인 인정이 제한되어 매우 번거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통용되던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 EU/영국으로 여행 및 이주를 원하는 영국/EU 국민들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때 까지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금전적·행정적 비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양자 간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는 분야였던 수산업의 경우 2025년 말까지 영국의 경제수역에서 영국 어민들에 대한 어획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였으며, 2026년 부터는 영국이 EU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 경우 EU는 영국산 수산물에 대해 각종 관세 및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용과 편익을 균형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대,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파트너로서의 영국의 지위는 EU와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및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들 보다 열위에 처하게 되었으며,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와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영국으로서는 다른 나라로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3. 영국의 대외통상정책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와의 공동시장 지위를 상실하게 된 영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접근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 예견된 성장동력의 위축을 만회하고자 노력해 왔다. 영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브렉시트가 완결되기 이전부터 EU 외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21년 1월 현재 총 6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한 형태(full ratification), 잠정적으로(provisional) 또는 경과적인 형태로(bridging)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EU와의 FTA 파트너국가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및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영국의 통상정책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EU와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거나(미국의 경우),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호주, 뉴질랜드의 경우)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활동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과의 무역협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의 통상정책 양상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을 계승함으로써 무역정책 및 무역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EU의 FTA 파트너국가 대부분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서 이를 엿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무역상대국들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일부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EU에의 시장접근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4. EU의 통상정책 전망

EU의 통상정책 기초는 브렉시트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발표한 Global Europe 전략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구사해 온 EU는 2015년 발표한 Trade for All 전략을 통해 '포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이전 10년 정도의 기간 중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FTA 확대전략의 기본방향을 '가치 지향적'으로 수정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즉,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용성을 고려하여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EU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FTA를 통한 무역확대와 투자협정을 통한 기업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통상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파트너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EU의 통상정책은 브렉시트의 충격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지경학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입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10년 이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도 통상정책의 방향설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EU의 대외통상정책은 2006/2015년에 채택된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EU가 중국과 성공적으로 체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도 이러한 EU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협정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EU는 강제적 기술이전 조항을 타파하는 규정의 도입, 국영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무조항 설치, 포괄적인 투명성 규정의 적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중국 정부의 약속 등을 통해 EU 기업들이 크게 개선된 영업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향후 EU가 체결할 다양한 통상협정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견지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 5. 한국의 대응

브렉시트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한국과 영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발효하여 양국 간의 무역관계에 연속성이 확보되었으며, 한-EU 통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던 기간 중, 특히 1993년 이후 EU가 단일유럽시장을 구축하여 공동시장으로 발전한 이후부터는 대체로 영국은 EU가 제정한 많은 시장관련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EU와는 별도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및 EU 회원국들과 동시에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상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 기업들이 EU 및 EFTA를 포괄하는 유럽경제지대(EEA)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EEA 기업들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자유로운 통행권리(passporting rights라고 부름)가 2021년 1월 1일을 기하여 종결되었다. 따라서, 27개 EU 회원국에서 주로

활동하고자 하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기업들은 보다 자유로운 영업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영국에 지사를 만들던 과거의 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6. 나가는 말

2021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던 브렉시트의 긴 여정이 종식되고, 영국과 EU는 새로운 통상협력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브렉시트가 중국적으로 영국과 EU에게 과연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 왔는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4년반 동안 보아 온 것들 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로 다양한 변화들이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는 현재까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세계경제는 브렉시트가 쏘아 올린 불확실성에 의해 여러 차례의 교란을 겪었으며, EU에는 또다른 회원국이 혹시 영국과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스멀거리기도 한다. 영국 또한 국민투표가 결정한 브렉시트를 되돌리지 못하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이면서 우왕좌왕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브렉시트는 특히 EU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의미했다. 1950년대 초반 유럽통합을 시작한 이후 아마도 가장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이다. 6개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28개로 확대일로만 걸던 EU의 회원국이 27개로 축소되는 위기였다. 특히 EU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있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영국의 탈퇴였기 때문이다. 일견, EU는 이러한 커다란 위기를 그나마 지혜롭게 잘 견뎌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폴란드 또는 헝가리 등 있을지도 모르는 잠정적인 탈퇴 희망국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협상의 전거도 보여 주었다.

브렉시트가 완결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앞으로 EU의 행보가 어떠한 것인가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브렉시트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커다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EU 공동체의식의 강화 등은 앞으로 EU가 통상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점쳐 볼 수 있다. 과연 EU가 경제에 치중된 통합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까지 통합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포인트이다.

---

1) 이에 따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 영토이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동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EU와 아일랜드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보드(hard border)' 대신 양측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소위 'four freedom')을 확보하였다. 한편 영국은 EU 회원국과 무관세, 무쿼타 상품교역 권한과 EU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기속되지 않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통관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이 아닌 아일랜드 해역에서 실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당분간 EU의 규정적용을 받으면서 상당기간 영국과는 다른 규제조치 적용받게 되어 장차 아일랜드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